

경제·평화 17번씩, 공정은 14번 언급... ‘국민체감’ 방점

文 대통령 신년사 주요 키워드

혁신 12차례, 포용 6차례 거론
“혁신의 기운 경제 전반에 확산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로 각각 17번씩 언급됐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메트로신문이 문 대통령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경제·평화 두 단어는 고르게 17번씩 언급됐다. '경제'는 작년 신

년 연설 때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평화'는 작년 13차례 언급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

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포용·혁신·공정 단어 중 '공정'은 14차례 거론했다. 혁신은 12차례, 포용은 6차례 각각 언급됐다. 평화를 지탱하는 단어로는 '남북'이 14차례 거론했다. 다음으로 '복미'가 6차례, '북한'이 5차례 각각 언급됐다.

문 대통령이 '새해 정부 정책 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로 '경제'를 부각하자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한 사회적 타협 ▲투자 프로젝트·인센티브 등 기업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포용과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수출과 설비투자를 반대시키고 더 좋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문 대통령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범여권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을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더욱더 담대한 평화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날 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고, 신년사 발표 후 국무회의의 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혁신적 포용국가 틀 다져” vs “현실 인식 동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文 대통령 신년사 '與野반응'

민주당 “文정부 과제 실천할 것”
한국당 “서민 목소리 경청해야”

다"며 "2019년 한 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수출 세계 7위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국민의 삶에 뿌리내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히 다졌던 한 해가 됐다"고 부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과제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박용찬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직시하는 신년사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선행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혁신·공정·평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을 말하기 전 국민 앞



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비서실 수석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 신년사 방송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 발표 후 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차 있다"며 "과연 통계만을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평가도 긍정적이진 않았

다. 정의당에선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며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에서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젠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정세균 인사청문회서 '삼권분립' 공방

(국무총리 후보자)

나경원 “검증 자체, 삼권분립 훼손”
丁 후보자 “기능의 분리일 뿐”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원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닌 이회창 총리도 계신다.” (박광온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논쟁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부터 이어졌다.

나 위원장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이런

특정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건 공정·중립선거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적을 보유한 국무위원을 세우는 게 일상적 관례가 됐다”고 질타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진영 장관, 선거 사범·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 국정을 통할하는 행정부 2인자에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정한 선거 내각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야당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삼권분립은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능의 분리”라고 반박했다. 또 현직 의장이 총리직을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지만 전직 의장이기 때문에 의전서열을 2위로 인정하는 곳도 없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대성 기자

이낙연, 민주당 복귀 초읽기 ‘정치권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의 더불어민주당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의 행보에 따라 정치권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시선이 이 총리에게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7일 기준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총리가 정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중로에 출마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격전지에 출마해 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난관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에서의 출마로 지역색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수는 총리 인준 절차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동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은 16일, 정 후보자가 이 때까지 지휘봉을 넘겨 받지 못하면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도 미지수가 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 총리가 사퇴할 수는 있지만, 총리직을 공식으로 두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앞서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 “(16일 전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이 총리가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대표로 나가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총리를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 전국적인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전략이다. /석대성 기자